[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

# 한국인이 보는 사회갈등구조의 변화와 정치·이념 양극화의 실상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

## I. 들어가며: 변화하는 한국사회 갈등구조를 정치·이념은 반영하는가

다양한 사회갈등(social conflict)이 공존하는 한 사회의 사회균열구조(social cleavages)는 그 사회의 정치체제(partisan cleavages) 및 이념적 균열구조(ideological cleavages)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 및 정치체제는 자원배분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대변(representation of conflict)'하는 역할과 함께,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conflict resolution)하고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정치적 조정(political coordinat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전자가 민주주의의 '대표성(representation)'의 수준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후자는 민주주의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연결되는 문제다. 한편 이념은 사회적 집단 간 갈등관계에서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제공하여 정당화하고, 사회집단을 결속시키며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투표선택, 집단행동을 동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van Dijk 1998). 다양한 사회적 갈등균열 구조 중 어떤 균열을 동원하느냐, 어떤 사회적 집단을 대표하느냐(반대로 억압하느냐)가 해당 정치/정당체제 및 이념갈등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곽진영1998; 성경륭 2009; 장훈 2006).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시대에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체제혼란과 등치되어 금기시되었던 시기를 거쳤다.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요인들은 억제되었다. 민주화 이후 90년대에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소위 권위주의 시대에 눌려있던 사회적 약자 계층의 반발과 이들의 이익 실현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지표이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사회갈등은 “(기존의) 비교적 단순한 갈등 구도에서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치이념적 갈등과 중첩되며 양극화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층, 학력, 지역, 세대 등 전통적인 갈등범주에 포함되지 않던 환경, 젠더, 이민 및 난민, 성소수자 이슈 등 새로운 갈등 이슈가 분출하는 양상이다. 전통적인 갈등 내에서의 분화도 심화되고 있다. 계급 갈등도 노동 대 자본의 구도 못지 않게 기업 내부(대기업-중소기업), 노동 내부(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심각해지고, 지역갈등도 기존의 영호남 갈등 대신 수도권-지방 간 격차, 국책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 갈등을 대변하고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갈등의 대변자이자 동시에 사회적 결속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하는 정당정치와 이념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 갈등과 균열을 심화시키는 핵심지점이며 갈수록 정치적 양극화 현상과 사회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심각해지고 있다(Abramowitz 2010; 이재열 2011; 이현우 외 2016).

그러나 정치와 이념이 사회갈등 요인과 중첩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라기보다 정치와 이념이 사회집단 갈등과 괴리되는 현상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관되게 있었다. 나아가 새로운 사회균열을 정당체계가 반영할 때 정치갈등의 안정적인 토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곽진영 1998; 최장집 2002; Bartolini and Mair 1990).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균열과 정당/이념적 중첩현상을 투표나 정당 지지에서 주요 “정당 지지자들이 사회균열 구조의 특정 집단에 집중된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집중성이나 “한 집단에서의 각 정당에 대한 지지분포가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해왔다. 특히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적 갈등, 이념적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왔고,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부상한 세대 및 이념균열이 지역균열을 대체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곽진영·김은경 2018).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고 본다. 첫째,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계열적 변화추이보다는 특정 시점의 횡단면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곽진영·김은경 2018; 이갑윤 2011).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변동추이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치균열과의 관계에서 (1) 지역 (2) 세대 (3) 이념 (4) 계층(사회경제적 갈등) 균열에 집중해왔다(강원택 2016; 곽진영·김은경 2018; 이갑윤 2011; 이내영 2011; 윤광일 2018). 이들 논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 균열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갈등(혜화역 시위, 20대 남자 현상, 난민 반대 운동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이영라·이숙종 2018). 셋째, 사회집단 간 갈등을 이익충돌임을 전제하는 논의들이 대다수이며, 새로운 사회갈등의 핵심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정체성 기반 사회갈등’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부족한 상황이다(정한울·송경재·허석재 2019).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전통적인 균열 구조 외에 한국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한 새로운 갈등요인들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이익기반 사회갈등’과 ‘정체성 기반 사회갈등’의 구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틀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사

회갈등인식 구조의 변동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2015년),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2020년), 한국리서치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주기로 네 차례 진행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이념적 양극화 현상의 순기능만 강조하거나 역기능만 강조하기보다는 정치이념 균열이 갖는 순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갈등은 집단적 결속(group unity)을 강화하고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 역시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를 강화시키는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Wagner-Pacifici and Hall 2012).[1] 그러나 사회갈등이 정치와 이념균열과의 중첩현상이 순기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1) 정당/이념체계의 사회경제적 현실 반영(중첩도 제고)현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2) 반영된 요구와 이익이 실제 쟁점 및 이슈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엄밀한 의미의 정당/이념의 사회적 기반 확대/연계 강화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특정 사회집단의 정치적, 이념적 집중도는 표면적인 중첩현상을 보여줄 뿐 사회적 집단이익 때문이 아닌 당파적 일체감 때문에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Abramowitz 2010; McCarty 2019).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사회갈등인식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인들이 전통적인 이익기반 사회갈등과 정체성 기반의 새로운 사회갈등을 실제로 구별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실제 정치균열과 이념균열이 사회적 갈등요인과 얼마나 중첩되고 있는지 다차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정치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실제로 심화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 탐색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II. 한국인이 본 한국사회 갈등구조 변화: 무엇이 핵심 사회갈등인가

이 장에서는 ① 주요 사회갈등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② 정치이념균열과 사회균열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갈등인식지형 변화 양상을 정리한다.

### 1. 사회갈등인식 지형 분석의 틀

#### ① 한국 사회갈등의 성격 분류: 이익 갈등 vs. 정체성 갈등

전통적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당사자 간 목표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충돌, 경쟁, 긴장'으로서 권위의 배분(distribution of authority)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이영라·이숙종 2018;

1) 사회갈등과 이념적 양극화의 역기능과 함께 순기능에 대해서 아브라모비츠의 연구(2010)와 McCarty(2019)의 연구를 참조할 것.

Darendorf 1971; 1988) '희소한 권력과 지위, 자원, 재화 등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목표추구를 방해하고 제약하는 투쟁'으로서 정의되어 왔다. 이들 전통적인 사회갈등에 대한 정의는 주로 정치권력(power)과 경제적 이해관계(wealth)를 둘러싼 적대적 관계 및 적대적 행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갈등은 '이익기반의 갈등(conflict of interest)'이며 주로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경쟁과 충돌 현상으로 간주되어 온 셈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 사회갈등(new social conflict)에 주목하는 논의들은 우선 '갈등의 자원과 갈등 영역' 차원에서 보면 신 사회갈등론은 전통적인 권력 및 경제영역에서의 이익기반 갈등 대신 문화적 차원에서 '정체성 기반의 사회갈등(conflict of identity)'의 확산에 주목한다. 즉 다양한 사회갈등이라도 크게 보면 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정체성 간 충돌에 기반한 사회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차원은 여러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정한울·송경재·허석재 2019; Gutmann 2002; Wieviorka 2014). 전통적 사회갈등과 대비되는 신 사회갈등의 이익갈등 기반의 사회갈등이 이익 중심 접근법에서는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갈등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참여의 기본적인 성격은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적' 행위(instrumental communication)이며 구성원들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된다(Olson 1965).

반면 전통적 사회갈등과 구별되는 정체성 갈등에서는 정체성(인종, 언어, 역사, 전통과 라이프 스타일 등)이 다른 사회 집단 사이에 '집단 구성원 간 상호 동일시(mutual identification)'와 '소수 집단 고유의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이 집단행동의 목적이 된다. 집단행동의 표출 방식도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적 실력 행사 대신 '자기표현적 참여(self-expressive communication)' 혹은 반대로 외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 표현에 기반한 갈등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Lvett 2010; Kymlicka 1995). 실제로 2013년 전후로 '일간 베스트 게시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5.18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비난이나 세월호 유가족 단식에 대한 폭식 투쟁은 기본적으로 혐오 표현 시위의 일환이었고, 2016년 반여성 혐오를 표방하는 메갈리아의 등장,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반대 시위에서 혐오 퍼포먼스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019년 5월 혜화역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자살하라'는 의미를 담은 '곰, 재기해'라는 구호와 퍼포먼스 등의 혐오 표현 등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정한울·송경재·허석재 2019; 홍성수 2019)[2)]

행위자 차원에서 보면 전통적인 권력 및 경제적 자원과 지위를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단일한 동일성을 공유한 조직화된 사회집단(예: 계층/계급 class, 민중 people, 대중 mass) 대신 다양한 차이와 이질성 속에서 자유롭고 수평적인 개인들이 연계된 네트워크로 '다중(multitude)'을 새로운 저항과 사회갈등의 행위자로 주목한다. 특히 디지

2) '재기'는 2013년 한강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빗대는 말로 '재기하라'는 말은 자살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곰'은 대통령의 성을 거꾸로 뒤집은 글자로 일간베스트 등 극우성향 커뮤니키에서 문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조롱... 선 넘은 혜화역 페미 시위"(2018/07/18).

털 문화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신 사회갈등의 주요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Hardt and Negri 2008, 268). 전통적 갈등에서의 행동의 주체는 기득권계급/특권권력에 저항하는 '취약 계층(the underprivileged class)'을 의미하는 계급, 대중, 민중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정체성 기반의 사회 갈등에서 저항의 주체는 여성, 성 소수자, 난민 등 '소수자 정체성(minority identity)'이다. 정체성 갈등은 주류 정체성(majority identity)집단에 대한 소수자집단의 사회적 인정투정으로 표출되곤 한다(Lvett 2010; Kymlicka 1995).

한편, 세계화, 정보화, 탈산업화, 탈물질주의화 현상 등이 새로운 사회갈등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Hardt and Negri 2004). 그중에서도 온라인 공간의 확장으로 전통적 갈등에서 중앙 조직이 수직적으로 동원하는 시위나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 개인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 집회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새로운 정체성 기반의 사회갈등에서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SNS가 다중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네크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와 약한 유대(weak tie)의 무정형의 공동체를 통해 집단행동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광범위한 대중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호응하는 새로운 집단행동 양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Bimber 2012; 정한울·송경재·허석재 2019).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갈등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구분 | 전통적인 사회갈등 | 신 사회 갈등 |
|---|---|---|
| 갈등 원천 |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 정체성의 충돌(conflict of identities) |
| 갈등 영역 | 권력과 경제적 영역 | 문화적, 가치 영역 |
| 행위자<br>(저항의 주체) | 대중(mass) 혹은 계급/계층(class)<br>(사회적 약자층/피 지배 계층) | 다중(multitude)<br>(사회적 소수자) |
| 행위자의 목표 | 이익 극대화(interest maximization) |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과<br>외집단의 배제(exclusion) |
| 집단행동의 성격 | 도구적 성격(instrumental mobilization)<br>ex) 오프라인에서의 파업, 폭력시위 등<br>실력행사 | 표현적 성격(self-expressive<br>mobilization)<br>ex)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및 차별<br>표현 공격,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대규모<br>시위 |
| 갈등표출 환경 | 오프라인 조직 중심으로 조직화된 대중,<br>정치적 대표체 혹은 이익단체에 매개된<br>행위자 | 자유로운 개인들의 다양하고 수평적인<br>네트워크의 연합 |
| 갈등 관리 기반 | 이익의 공유(shared interest)<br>집단행동의 딜레마 해결 | 정체성의 공유(mutual identification)<br>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

■ 자료: 정한울·송경재·허석재(2019)

### ② 정치이념균열은 사회균열을 얼마나 반영하나

한편 정치이념균열과 사회균열 관계도 해당 사회의 사회갈등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 질문 중 하나이다. 정당/이념 균열이 사회균열을 반영한다는 립셋과 로칸의 고전적 연구나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논의가 반영론을 대표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방향은 다르지만, 정당/이념 진영이 다수연합의 형성을 위해

특정 사회균열을 동원할 경우 정치/이념균열과 사회균열은 조응 혹은 중첩(overlapped)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대립되는 입장으로는 정치/이념균열과 사회경제적 균열 사이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다. 과거 계급 및 사회균열에 조응하는 유럽의 계급정당/대중정당 체제와 달리 소위 선거승리연합 구축을 우선하는 "Catch-all party"나 "선거전문가 정당" 시스템의 경우 사회균열과의 연계가 약하거나 이와 독립적 정당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강원택 2016; 진영재 2020; Lipset and Rokkan 1967).

기존 선거 및 정당연구에서는 사회균열과 정치이념균열 간의 관계를 주로 개인의 이념성향, 투표선택, 정당태도(지지정당)에 사회경제적 지위(소위 social economic status SES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개인행태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 초기 '지역주의'에 기초한 지역균열이 정치균열과 선거균열을 좌우했다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이념균열', '세대균열'이 지역균열과 교차하며 지역정당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균열선으로 부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왔다. 선거연구에서는 대체로 지역투표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대신 세대투표나 이념투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이념균열은 서구처럼 개인의 계급적 요인보다 대북안보 이슈에 대한 태도 균열에 기반하고 있다. 계급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계급배반투표' 현상으로 대표되듯 하위계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북안보 이슈에 대한 태도 균열이 이념 및 정당균열의 핵심 축이라는 입장이 주류적 시각이었다. 최근에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계급균열, 복지정책 선호 등 경제이슈 선호가 투표행태와 정당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강원택 2010; 문우진 2017; 이내영 2011).

## 2. 사회갈등 인식구조의 특징과 변화 양상

우선 이 장에서는 한국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갈등구조에 대한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이익갈등 요인으로서의 전통적 갈등과 정체성 기반의 새로운 갈등요인의 분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보다 주목할 결과는 이전까지 사회갈등 요인들에 대한 인식과 동일 차원으로 인식되어 왔던 정당갈등 및 이념갈등이 최근 독립적인 차원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① 한국인은 이익갈등과 정체성 갈등을 구분할까?

본 국가정체성 조사에서는 한국의 주요 사회 갈등집단별로 "다음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대해 '매우 크다'부터 '매우 작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 조사 차수마다 조사하고 있다. 갈등별로 심각성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평가 대상으로는 '양대 정당 간 갈등'부터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빈부갈등)', '기업가와 노동자(노동-자본)',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와 같은 전통적인

계급갈등 축과 함께 200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본 내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노 갈등)'과 같은 새로운 계층갈등 요인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민주적 전환기에 한국 정치의 갈등 축을 담당했던 '영호남 지역갈등'과 이후 지역주의를 대신해 선거 투표균열의 기본 축을 담당하는 '이념갈등', '세대갈등', 민주화 이후 거버넌스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과 지방주민 간 갈등'과 '젠더 갈등'에 대해 한국인의 인식지형을 꾸준하게 추적하고 있다.[3)]

한국인들이 사회갈등을 평가하는 인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1개 사회갈등에 대한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를 제시한다. 요인분석은 개별 변수들에 대한 응답의 상관성을 기준으로 변수들을 그룹핑하고 내재하는 공통의 차원, 공통의 요인을 발견하는 기법이다(Hair et al. 2019). 요인 간 이질성(독립성), 요인 내 변수 간 높은 상관성을 보이도록 개별변수들을 분류하고 이들 공통요인의 특성을 추론하여 개별 변수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추론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1) 한국인들이 사회갈등을 이익갈등차원(요인)의 사회갈등들과 정체성 기반 사회갈등들로 구별하는 구조화된 인식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2) 정치갈등과 이념갈등은 이익갈등을 대표하는지, 아니면 정체성 차원의 갈등을 대표하는지 추론해보고자 함이다. 〈표 1〉과 〈표 2〉는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추적해온 11개 사회갈등 변수에 대한 1~4차까지의 응답을 조사 차수별로 요인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사회갈등 분석을 위해 제시한 '이익-정체성 갈등' 분류틀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 스스로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에 대한 인식이 '이익갈등'과 '정체성 갈등'의 차원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1차 조사부터 2020년 4차 조사까지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기업가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갈등 인식이 동일 차원으로 분류되고, '영남 주민과 호남 주민', '수도권 주민-지방 주민', '남성과 여성' 갈등이 동일 차원으로 일관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가정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요인을 '이익기반 갈등요인'으로, 후자의 요인을 '정체성 기반 갈등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네 차례 조사결과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이익 갈등' vs '정체성 갈등' 분류틀로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이익갈등과 정체성 갈등의 구분이 한국사회 갈등 지형을 분류하는 데 유용한 분류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4)] 그러나 최근 경제적 이익충돌 기반 사회갈등 외에 기존 문화와 차별화된

3) 양대 정당 갈등의 경우 2005년 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2010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2015년 조사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2020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보기가 제시된 결과다. 2005년 조사에 포함되었던 '엘리트와 일반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2010년까지만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2010년 조사부터, '행정부와 입법부'는 2015년부터 포함되었고,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갈등은 2015년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사회집단 간 갈등은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서 권력기관 간 갈등 요인(행정부와 입법부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에 대한 평가는 각각 2차, 3차 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이 장에서는 2020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항목과 권력기관 간 갈등 요인인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행정부 대 입법부' 인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갈등의 경우 1차 조사에서, '세대 갈등' 변수의 경우 1차와 4차 조사에서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이 4점대로 다소 낮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정체성 요인 적재값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익갈등 요인으로 분류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1) 디지털 문화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young generation)가 등장하고, (2) 정치경제적 균열에 의해 상대적으로 억제되었던 다양한 집단(주로 사회적 소수/사회적 약자 집단)의 사회적 인정 투쟁이 강화되고 '혐오-차별'을 수반한 정체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젠더, 성소수자, 난민, 수도권-지방 등 정체성 갈등요인이 향후에 중요한 사회갈등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정체성 갈등요인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지 않는다(정한울·송경재·허석재 2019; Bimber 2012, 164-165; Gutmann 2002, 542-3).

〈표 2〉 11개 개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결과(2005년~2015)[5]

| | 2005 | | 2010 | | 2015 | |
|---|---|---|---|---|---|---|
| | 이익갈등 | 정체성 갈등 | 이익갈등 | 정체성 갈등 | 이익갈등 | 정체성 갈등 |
| 빈자와 부자 갈등 | .767 | .129 | .803 | .149 | .751 | .064 |
| 기업가와 노동자 | .686 | .270 | .699 | .180 | .799 | .082 |
| 정규직과 비정규직 | .569 | .373 | .670 | .198 | .674 | .267 |
|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 .626 | .393 | .703 | .165 | .635 | .303 |
| 대기업과 중소기업 | .437 | .437 | .669 | .282 | .578 | .305 |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 .488 | .343 | .524 | .377 | .681 | .064 |
| 정당 갈등 | .596 | -.030 | .648 | .134 | .596 | .061 |
| 영남사람과 호남사람 | .233 | .579 | .261 | .632 | .016 | .720 |
|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 .239 | .724 | .204 | .714 | - | - |
| 남성과 여성 | -.048 | .809 | .050 | .802 | .112 | .744 |
| 진보와 보수 | .317 | .620 | .468 | .520 | .372 | .600 |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a. 3 반복계산 후 수렴 a. 3 반복계산 후 수렴 a. 3 반복계산 후 수렴
회전 방법: 베리멕스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표 3〉 11개 개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결과(2020)

| | 성분 | | |
|---|---|---|---|
| | 이익갈등 | 정체성 갈등 | 정치이념갈등 |
| 빈자와 부자 | .753 | .099 | .065 |
| 기업가와 노동자 | .693 | .117 | .264 |
| 정규직과 비정규직 | .679 | -.015 | .230 |
|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 .630 | .364 | .073 |
| 대기업과 중소기업 | .527 | .307 | .112 |
|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 .449 | .372 | .330 |
| 남성과 여성 | .114 | .789 | -.024 |
| 영남사람과 호남사람 | .006 | .634 | .417 |
| 수도권 주민과 지방주민 | .339 | .604 | .026 |
| 정당 갈등 | .289 | -.031 | .788 |
| 진보와 보수 | .146 | .171 | .760 |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a. 6 반복계산 요인회전 수렴
회전 방법: 베리멕스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5) 2015년 조사에서 '수도권 주민-지방주민' 갈등은 조사 문항에서 제외되어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 ② 정치·이념 균열의 분화와 갈등 심화

앞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정치·이념 균열과 사회균열과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가 눈에 띈다. 2005~2015년까지 이익갈등 혹은 정체성 갈등에 포함되었던 정당 갈등 및 이념 갈등에 대한 태도가 2020년 조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2015년 3차 조사까지 '양대 정당 갈등'은 '세대갈등'과 함께 '이익갈등 차원'으로 분류되었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은 지역주의 갈등, 젠더갈등과 함께 정체성 갈등 차원으로 분류되어 왔다. 정당갈등은 주로 세대갈등 및 기득권 계층과 하위 계층간의 계급갈등 인식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반면, 이념갈등은 지역과 젠더갈등 인식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한국에서의 이념이 서구의 계급균열을 반영하기보다는 대북안보 이슈나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사회이슈를 반영하거나 한국의 진보이념은 사회경제적 진보정책보다 냉전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해온 역사적 유산으로 보인다(강원택 2010).

그러나 2020년 조사에서는 기존의 이익갈등, 정체성 갈등으로 수렴되었던 정당갈등과 이념갈등이 독립적인 정치이념적 갈등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는 한국인들 다수가 정치갈등과 이념갈등이 사회갈등 요인들과의 연계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정당 간 정책 및 이슈 경쟁이 크게 퇴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사실 2010년 무상복지 논쟁부터 이후 한국 주요선거에서 정책 및 이슈 투표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탄핵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사회계층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쟁점이 크게 퇴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기되어왔다(한규섭 외 2018). 정치이념 갈등과 사회갈등 요인과의 분화현상은 이러한 정책 쟁점의 퇴행을 설명하는 가설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사회집단과의 연계가 약화된 결과 정당의 정책 경쟁의 유인과 압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양 정당이 정책 경쟁 대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색깔론 등의 이념공세에 의한 동원에 전념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강원택 2016; 정한울 2020).

더구나 정치갈등과 진보 대 보수의 이념갈등은 현시점에서 최대의 사회갈등 요인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는 지난 15년간 심각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커져 왔다. 2020년 제4차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간의 정치균열과 '진보 대 보수'의 이념균열을 꼽은 응답(매우+ 대체로 크다)이 각각 90%, 8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80%),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79%), '기업가와 노동자'(73%), '대기업과 중소기업'(66%), '고학력자와 저학력자'(64%) 등 계층 간, 계층 내 균열요인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계급갈등의 축으로 인식되어 온 소위 '빈부 격차'나 '노자(기업가와 노동자)갈등' 등 불평등 균열 축 못지않게 공정성 이슈가 부각되는 '노-노(정규직과 비정규직)'와 '자본 내 갈등(대기업

과 중소기업)' 등 계급 내부 갈등요인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 정치균열에 영향을 미쳐온 '세대균열(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64%)이나 '지역균열(호남 대 영남 주민)'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크다는 인식(59%)이 과반을 넘어 그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정당/이념 갈등이나 여타 경제적 이익갈등 요인들에 비해서는 심각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44%), '남성과 여성'(35%) 등 이익 충돌보다 집단 간 정체성 갈등 성격이 큰 요인들에 갈등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6)]

〈표 4〉 한국인의 주요 사회집단 간 갈등 평가(2020년)

| | 크다 ("매우"+"대체로") | 보통이다 | 작다 ("매우"+"대체로") | 합계 |
|---|---|---|---|---|
| 양대 정당 | 90 | 9 | 1 | 100 |
| 진보와 보수 | 83 | 15 | 2 | 100 |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 80 | 18 | 2 | 100 |
|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 79 | 17 | 4 | 100 |
| 기업가와 노동자 | 73 | 25 | 4 | 100 |
| 대기업과 중소기업 | 66 | 29 | 6 | 100 |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 64 | 30 | 12 | 100 |
|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 64 | 29 | 7 | 100 |
| 영남사람과 호남사람 | 59 | 30 | 11 | 100 |
|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 44 | 43 | 14 | 100 |
| 남성과 여성 | 35 | 43 | 21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③ 변화추이: 정당갈등 및 이념 갈등의 심화/이익계층갈등 정체/정체성 갈등의 잠복

〈그림 1〉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과정을 한국인이 체감하는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균열요소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독립적인 갈등요인으로 분화된 정당 및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변화가 두드러진다. 양대 정당간 갈등은 2005년 1차 조사부터 그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던 갈등요인이었고 줄어들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다(1차 86% → 2차 83% → 3차 85% → 4차 90%). 그러나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은 2005년 1차 조사부터 2015년 3차 조사까지는 정당 간 정치균열이나 다른 계층적, 계급적 갈등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균열 축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2020년 제4차 조사에서는 큰 변화가 생겼다.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2005년 1차 조사에서 63%에 그쳤으나 2020년 4차 조사에서는 83%로 15년 사이에 무려 20%p나 증가했고, 정당 갈등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차 63% → 2차 62% → 3차 75% → 4차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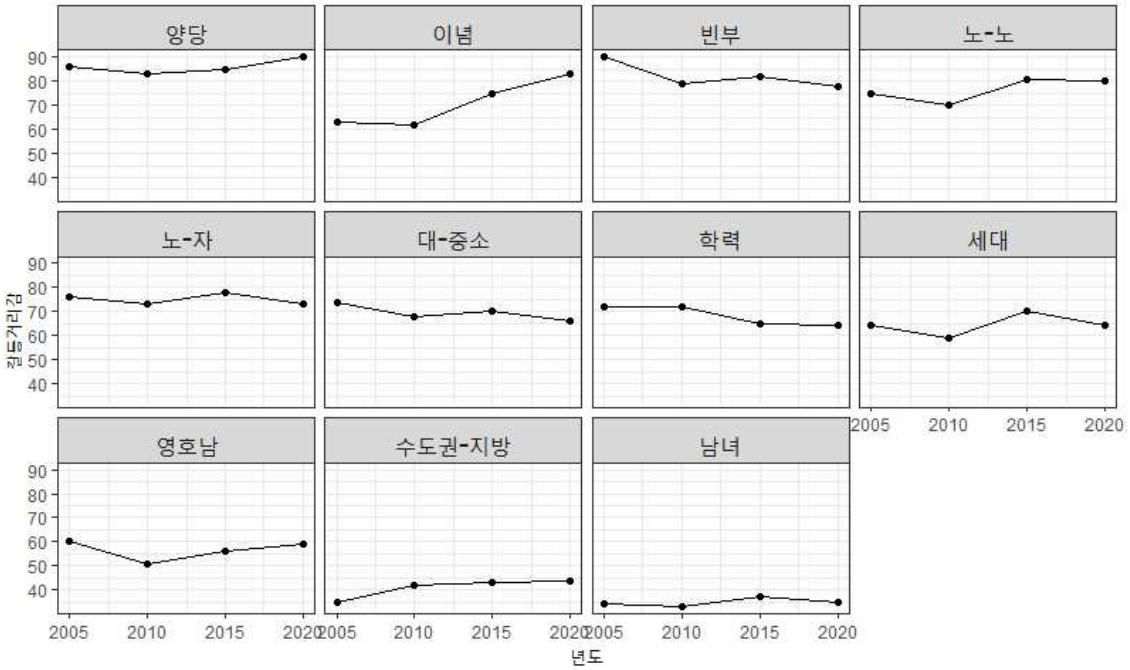
반면 2005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90%)을 받았던 '빈부갈등'은 2020년 4차 조사에서는 78%까지 떨어져, 완만하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1차 75% → 2차 70% → 3차 81% → 4차 80%) 다음 순위로 내려왔다. 그 외

6) 참고로 2020년 4차 조사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권력기관 내의 갈등에 대해서도 크다는 응답이 각각 45%, 42%에 그쳐 다른 사회집단 간 갈등보다는 심각하지 않게 보고 있다.

계층 갈등 요인인 '기업가-노동자'(1차 76% → 4차 73%), '대기업-중소기업'(1차 74% → 4차 66%), '학력 격차(1차 72% → 4차 64%)' 등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체되거나 완만하게 약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요인을 제외하면 계급이익, 집단이익 갈등과 관련된 요인은 대체로 정체되어 있거나 갈등의 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새로운 갈등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갈등 요인들은 '영호남 갈등', '수도권-지방 주민갈등', '남녀 젠더갈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의 한국사회의 핵심 균열구조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정도로 변동을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호남 갈등이라는 대표적인 지역갈등의 경우 2010년 조사에서 다소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정당이념 갈등이나 이익기반 계층 갈등 요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사회갈등별 심각성 인식의 변화(1차~4차 조사): "크다"고 답한 비율(%)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III. 개인 행태로 본 사회균열과 정치·이념 균열

한국사회의 사회갈등 요인 평가에서 나타난 최근 정치갈등과 이념갈등이 서로 동일차원으로 그룹핑되고 기존의 사회갈등요인들과 분화되는 현상이 개인 수준의 태도에서도 확

인할 수 있을까?[7]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사회집단과 계층별로 개인 선호와 태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개인이 소속된 사회계층별로 정치적 태도(정당 태도)와 이념적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 변화를 살펴본다.

## 1. 정치적 태도와 이념적 양극화의 심화

### ① 보수 우위에서 진보 정당 우위로: 무당파의 감소와 보수 이탈층의 전향

우선, 정치적 태도의 균열은 대표적인 정치적 태도측정 변수인 '정당'에 대한 태도(정당지지)로 살펴보고 개인의 이념적 태도는 주관적인 이념평가(이념 정체성)와 객관적인 이슈 태도들에 대한 실제 선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강원택 2016; 이현우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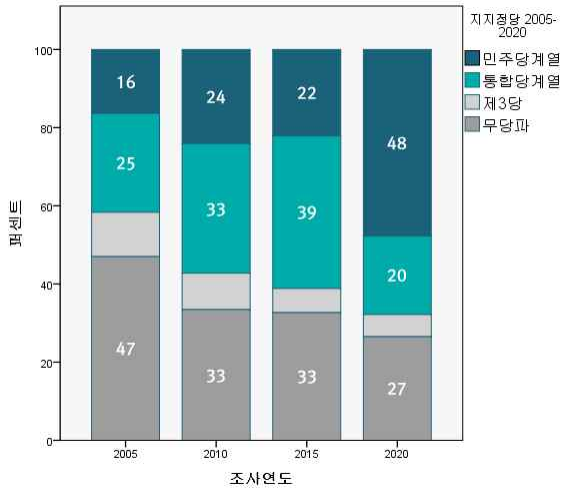
먼저 자신의 자기이념평가를 기준으로 정치태도와 이념적 정체성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자.[8] 국가정체성 조사의 지지정당 응답결과를 보면 많은 학자들이 한국 정당체제 위기의 근거로 지목되어 온 무당파 증가 현상과는 상반된 결과가 확인된다. '지지정당 없음',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한 무당파 비율은 2005년 조사에서 47%에 달했지만 꾸준히 하락하여 2020년 4차 조사에서는 27%대까지 하락했다. 무당파 측정의 신뢰성 문제와 실증적 근거의 부족을 지적한 박원호·송정민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9] 둘째,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비율보다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의 지지우위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정당지지의 역전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재편은 2016년 촛불시위와 2017년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기존 보수정당 지지층의 이탈 과정에서 무당파로의 '탈동원(demobilization)' 못지않게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의 '전향(conversion)'으로 귀결된 영향으로 보인다(정한울·강우창 2017; Kang and Jeong 2019).

한편 주관적 이념정체성의 변화를 보면 대체로 2015년 3차 조사까지 보수층의 규모는 일정한 반면 진보층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중도층이 증가(2005년 40% → 2015년 49%)했지만, 2020년 조사에서 진보층의 규모가 20%에서 31%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과 보수층의 규모는 약간 감소하였다. 진보층의 증가 현상 역시 같은 기간 발생한 촛불 시위와 대선 이후 네 차례의 전국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년 대선부터 2020년까지의 네 차례의 전국 선거 과정에서 정당 지지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와 선거결과에서 보수당이 대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큰 압승을 거둔 것에 비해 이념적 정체성에서 진보의 우위 현상은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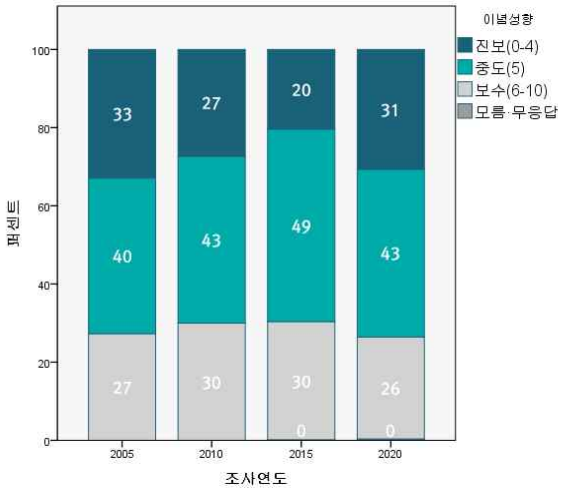
7) 이는 양 균열이 교차(cross-cutting)하기보다는 중첩(overlapping), 즉 상관관계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Lipset and Rokkan 1967).
8) 주관적 성향집단은 0에서 10점(0은 매우 진보, 5를 중도, 10은 매우 보수) 척도에서 자신의 이념위치로 답한 점수를 진보(0~4점), 중도(5점), 보수(6~10점) 세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9) 정당일체감 혹은 무당파 측정의 신뢰성 문제가 내포되어 있지만, 동일방법, 동일문항으로 측정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라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결과이다. 무당파 측정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박원호·송정민(2012)를 참조할 것.

각보다 크지 않다. 이념 구도의 재편에 기반한 정당지지 역전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촛불 전후 정당 지지재편을 소위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불리는 구조적인 재편으로 보기 어렵다(Kang and Jeong 2019).

〈그림 2〉 지지정당 분포 변화




〈그림 3〉 주관적 이념정체성 변화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그림 4〉에서 켄달의 타우b 지수를 활용하여 지난 15년간의 상관관계의 변동을 살펴보면 이념정체성과 정당지지 사이의 중첩현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강화되어 왔는지 체감할 수 있다. 상관계수 (+) 부호인 경우 양의 상관관계, (−) 부호는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켄달의 타우b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면 두 변수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양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95% 신뢰수준에서 기각함으로써 양 변수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념정체성과 지지정당 간 상관관계는 전 조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차 공히 tau-b 계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 계수의 절대값의 크기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 0.4를 넘어서고 있다(1차 조사 0.116, 2차 0.172, 3차 0.346, 4차 0.424). 특히 3차 조사 시점에서 급상승했으며 2020년 조사에서는 0.424로 상관관계의 수준이 한 차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10]

10)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 미만은 약한 상관, 0.3~0.6 미만은 상당한 상관관계, 0.6 이상은 강한 상관관계로 해석한다.

〈그림 4〉 이념-정당지지간 상관계수(Kendall's tau-b) 변화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② 지지정당별 이념적 거리 확대: 양당 지지자의 이념적 양극화 심화

지난 네 차례의 조사는 개인수준에서의 정당태도와 이념적 정체성 사이의 상관관계(중첩도)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 지지자 간의 이념성향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조사에서 0점을 매우 진보, 중도를 5점, 10점을 매우 보수로 하여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물어본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자. 2005년 1차 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는 4.46, 한나라당 지지자의 이념평가는 5.30으로 양 집단 간 이념거리는 0.84에 불과했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평균적으로 중도 포지션인 5점에 근접해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조사에서도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이념평가 점수 평균이 4.76으로 2005년도의 위치보다 오히려 중도(5점)에 방향으로 이동했다. 다만 한나라당 지지자가 자신의 이념위치를 평가한 결과의 평균이 5.67로 2005년 조사 결과보다 0.36점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양당 지지층의 이념적 거리는 0.91로 더 벌어졌다. 2015년 조사에서부터는 양당 지지층의 스스로의 이념평가 위치가 더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는 자기이념평가 평균이 4.43으로 역시 2010년 대비 좌향좌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 지지자도 6.16으로 평가해 보수화의 경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기 양당 지지자간 이념평균 점수의 격차는 1.73까지 벌어진다. 촛불과 탄핵을 거친 후 실시한 2020년 조사에서는 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주관적 이념평가는 4.19로 2015년 조사결과보다 진보적 정체성이 강해진 반면, 현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6.90으로 2015년 대비 보수정체성이 훨씬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당 지지층 이념거리는 2.71까지 확대된다. 각 당 지지자의 2020년 이념평가점수와 2005년 조사의 평가점수 차이를 보면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자의 경우 −0.27점 왼쪽으로 이동하는

데 그쳤지만, 통합당 계열 지지자가 +1.60점으로 양당 지지자의 이념거리 확대는 주로 통합당 지지자의 보수화 현상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조사 시점별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와 통합당계 정당 지지자의 이념평균 거리

| 연도 | 민주당 계열 지지자 | | 통합당 계열 지지자*** | | 양당 지지자 이념거리(평균) | |
|---|---|---|---|---|---|---|
| | 평균(A) | N | 평균(B) | N | 갭(B-A) | T-test(p) |
| 2005 | 4.46 | 170 | 5.30 | 263 | 0.84 | 0.000 |
| 2010 | 4.76 | 245 | 5.67 | 338 | 0.91 | 0.000 |
| 2015 | 4.43 | 223 | 6.16 | 391 | 1.73 | 0.000 |
| 2020 | 4.19 | 478 | 6.90 | 200 | 2.71 | 0.000 |
| 2020-2005 | -0.27 | 308 | +1.60 | -63 | 1.87 |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 p<0.001(카이제곱 검정)

## 2. 사회계층별(세대/지역/계층) 정치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정체

앞 절에서 이념 및 정당 갈등에 대한 평가는 상관관계가 높아진 반면 여타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는 독립적인 관계로 분화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이념균열과 정당균열 간 상관관계는 높아지는 대신 이들 이념/정당 균열과 다른 사회균열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약화되는 현상은 개인수준의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이념정체성 집단과 정당지지 집단, 사회균열로서의 '세대-지역-계층(소득/주관적 계층정체성)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 변화를 살펴본다.[11]

### ① 세대/지역 요인의 영향력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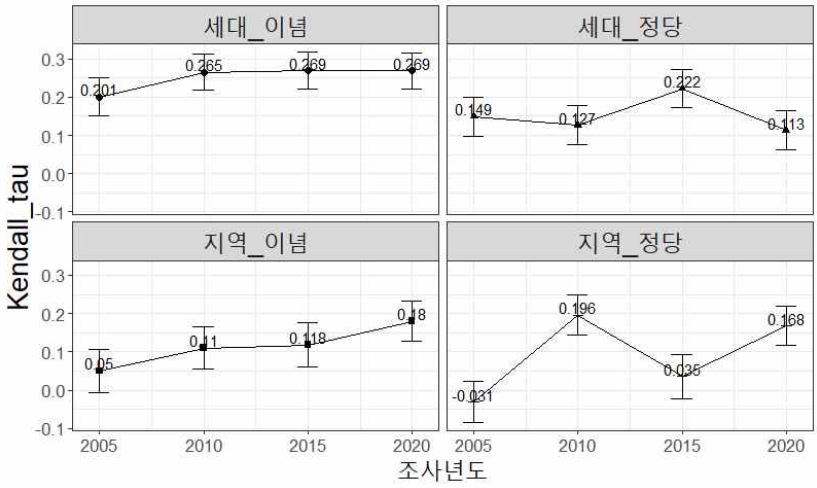
〈그림 5〉에서 세대 및 지역과 이념정체성 및 정당지지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세대의 경우 이념정체성 변수와의 켄델의 타우b 계수가 0.201(2005년)에서 0.269(2020년)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아지고 세대집단 간 이념성향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의 크기가 0.2대에서 벗어날 조짐이 없다. 정당지지와의 상관관계는 매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임은 확인되었으나 계수의 절대값이 0.2를 넘었던 2015년 조사를 제외하면 0.1 전후의 미약한 상관관계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세대와 이념, 세대와 정당지지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이념정체성, 정당지지, 세대, 지역, 계층정체성 변수는 서열척도 혹은 명목변수이자, 분류범주의 수가 3개 이상이다. 여기서는 명목변수인 정당지지, 지역 변수를 주관적 이념평가 평균의 위치 순으로 서열변수로 변환하여 켄달의 타우-b 상관계수(Kendall's tau-b coefficient)를 활용하여 양 변수 간 상관관계 강도를 측정했다(Lewis-Beck et al. 2008). 연령은 20대 → 60대 순(5점 척도), 지역은 호남 → 비영호남 → 영남지역 순(3점 척도), 월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10점 척도), 계층정체성은 하위계층 → 상위계층, 이념정체성은 진보 → 중도 순(3점 척도), 정당지지는 민주당계열 → 미래통합당 계열 순(4점 척도)으로 이념성향 순(진보 → 보수)으로 서열화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그림 5〉 하단 그래프에서 지역변수와 이념 및 정당지지 태도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면, 지역과 이념정체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임이 뚜렷해지고 상관관계의 크기도 커지는 양상이다(2005년 조사에서는 신뢰구간에 0 포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볼 수 없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0을 벗어나 있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크기가 여전히 0.2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지역-이념정체성 간 상관관계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우하단 지역과 정당지지 사이의 관계는 이념정체성과 비교할 때 변동이 크다. 2005년과 2015년 조사에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으나 2010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지역과 지지정당 사이에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역과 이념, 지역과 지지정당 사이의 상관관계는 세대와 이념/지지정당 관계에 못 미친다.

특히 2016년 총선 전후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 돌풍,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보수층 내 균열, 영남 지역의 정치행태적 분화(특히 TK와 PK 지역 간 편차)가 중요한 지역과 이념, 지역과 정당지지 간 중첩현상을 완화시킨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본 조사의 결과와 일치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물론 영호남 지역 간 이념성향(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정치행태에서의 차이가 여전하거나 지역-이념 중첩현상을 주장한 연구결과도 여전하다(문우진 2017; 지병근 2013; 윤광일 2018). 그러나 본 국가정체성 조사 데이터에 근거할 경우 지역과 정당지지/이념 간 중첩현상은 약화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강원택·성예진 2018).

〈그림 5〉 세대와 지역의 이념정체성 및 정당 지지와의 상관계수 변화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② 20대의 진보 이탈현상, 세대정치 영향력 상쇄

세대정치의 영향력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20대의 진보이탈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의 2017년 세대별 대선 투표, 〈표 7〉의 2020년 21대 총선에서의 세대별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수후보, 보수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전통적인 선형관계가 확인되나,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진보 경향은 크게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역U자 패턴을 보여준다.

〈표 6〉 19대 대선에서의 세대별 지지 후보(%)

| | 2017년 19대 대선 지지후보*** | | | | | | | | |
|---|---|---|---|---|---|---|---|---|---|
| 조사연도 | 문재인 | 홍준표 | 유승민 | 안철수 | 심상정 | 다른 후보 | 기권 | 모름 무응답 | 전체 |
| 19-29세 | 43 | 6 | 5 | 7 | 4 | 1 | 29 | 5 | 100 |
| 30대 | 66 | 7 | 2 | 4 | 4 | 2 | 12 | 4 | 100 |
| 40대 | 65 | 9 | 5 | 5 | 4 | 2 | 9 | 3 | 100 |
| 50대 | 55 | 22 | 3 | 6 | 2 | 4 | 7 | 3 | 100 |
| 60대+ | 48 | 31 | 1 | 5 | 1 | 4 | 6 | 3 | 100 |
| 전체 | 55 | 17 | 3 | 5 | 3 | 3 | 11 | 3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 p<0.001(Chi2=146.090, df=28)

〈표 7〉 21대 총선에서의 세대별 비례정당 투표(%)

| | 2020년 21대 총선 비례투표*** | | | | | | | | |
|---|---|---|---|---|---|---|---|---|---|
| 조사연도 | 민생당 | 미래 한국당 | 더불어 시민당 | 정의당 | 다른 정당 | 기타 | 투표권 없음 | 기권 | 모름 무응답 | 전체 |
| 19-29세 | 3 | 14 | 33 | 10 | 4 | 1 | 2 | 26 | 8 | 100 |
| 30대 | 4 | 16 | 45 | 7 | 2 | 1 | 1 | 18 | 6 | 100 |
| 40대 | 3 | 14 | 46 | 13 | 4 | 4 | | 13 | 3 | 100 |
| 50대 | 5 | 34 | 36 | 9 | 4 | 3 | | 7 | 3 | 100 |
| 60대+ | 3 | 46 | 36 | 4 | 2 | 0 | 0 | 5 | 4 | 100 |
| 전체 | 4 | 27 | 39 | 8 | 3 | 2 | 0 | 13 | 4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 p<0.001(Chi2=171.830, df=32)

이러한 경향은 이미 2015년 전후 선거나 성장/복지 이슈, 대북안보 인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의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비례정당 출구조사에서 20대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36%로 30대의 40%, 40대의 43%에 미치지 못하고, 미래한국당 지지율은 23%, 정의당이 13% 수준이었으나 국민의당 지지율(10%)과 기타 정당 지지율(16%)을 합하면 26%나 되었다. 2016년 20대 총선 비례투표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 국민의당이 26%, 새누리당이 17%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2012년 19대 총선 비례투표에서는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47%로 30대와 함께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던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방송 3사 출구조사 2012; 2016).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대신 무당파나 투표에서는 기권, 정당 지지에선 제3당 후보나 제3정당에 대한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이다(정한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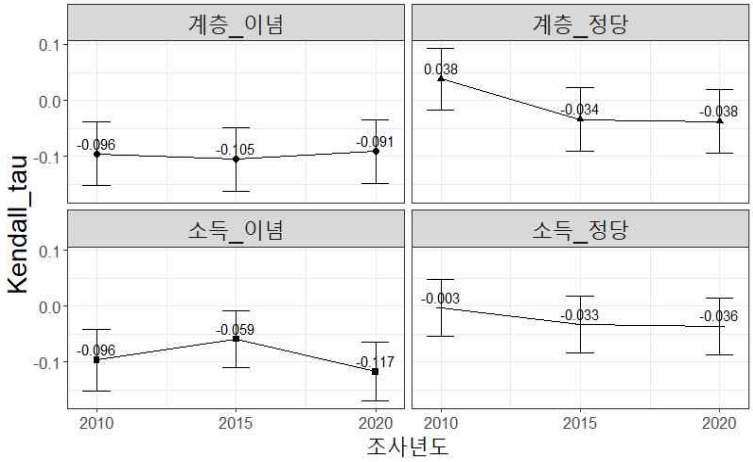
20대의 진보 이탈현상이 바로 보수정당 지지나 보수이념에 대한 일체감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20대의 보수화' 현상으로 부르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으나 20대의 진보/민주당계 후보/정당 지지에서의 이탈현상이 세대와 이념/정당지지 간

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임은 분명해 보인다(천관율·정한울 2019). 20대에서 진보의 최대 지지기반에서 이탈하는 스윙보터의 성향, 제3정당 지지 혹은 탈 진보 성향의 경향성은 일관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대의 경우 지역-이념의 중첩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에서는 영호남 거주지역에 따라 이념적 성향차이가 유의하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지역별 이념격차가 유의하지 않다고 한다(강원택·성예진 2018).

### ③ 계층/소득의 영향력은 미미: 계급배반성향과 빈곤층 정체성의 인플레이션

앞에서 한국인들이 계층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당갈등 인식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던 것과 달리 개인 수준에서 계층적 요인(주관적 계층정체성/객관지표로서의 소득수준)은 이념정체성과 정당지지 사이에 뚜렷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 조사결과를 보면 계층정체성/소득 차이는 지지정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신뢰구간에 0 포함), 계층정체성/소득계층과 주관적 이념성향 사이에는 미약하나마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0.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상관계수의 부호를 보면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공히 (-)로 일반적인 의미의 계층/계급정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상위계층으로 인식하거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진보 정체성을 갖고, 하위계층 정체성,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이념과 보수정당지지 성향이 강한 소위 '계급배반' 성향(class betrayal voting)을 보여준다. 저소득/하위계층에서 보수이념을 선호하거나,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성이 발생한 것은 '강남좌파'로 상징되는 고학력, 중상위 소득층이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자리 잡은 현상과 보수 정체성이 뚜렷한 고연령층의 빈곤화 현상이 강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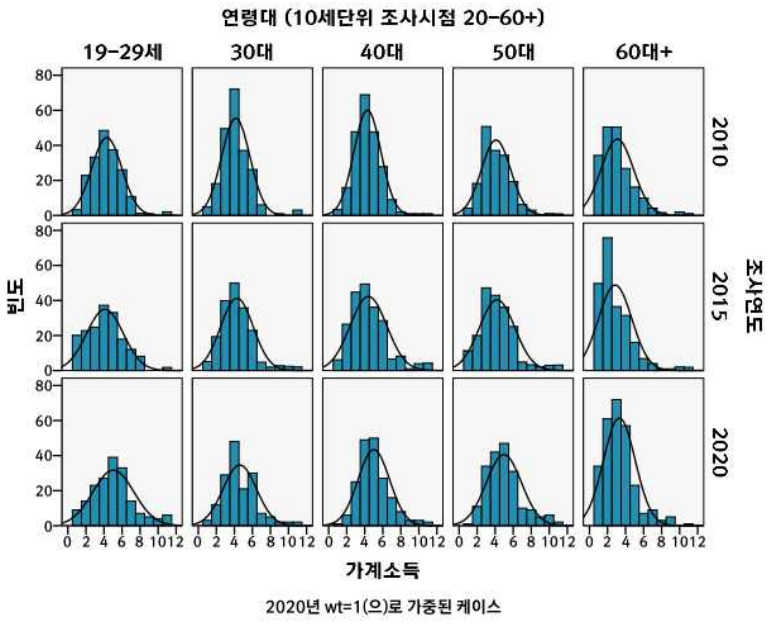
〈그림 6〉 주관적 계층인식/가구소득별 이념정체성과 지지정당 간의 상관관계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실제로 소득수준(100만원 이하~1,000만원 초과, 1~11점)을 연령대로 나누어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응답자들의 소득분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많이 편중된 분포(right-skewed distribution)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60대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각 세대의 응답평균과 중위수를 보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 조사에서의 가구소득 상승은 명목 소득 상승을 의미하며, 물가상승이나 가처분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중위수 기준으로 보면 60대와 그 외 세대의 가구소득 사이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단적으로 2020년 조사에서 중위수(median)를 기준으로 보면 20대~50대의 경우 4점(30대 중위수, 월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에서 5점(20대, 40대, 50대 중위수, 월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으로 상승해왔지만, 60대 응답자의 가구소득 중위수는 여전히 3점(월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 그치면서 다른 세대의 가구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상대적 빈곤층, 하위계층 비중이 커지고, 전체 한국인 성인남녀 내 구성비가 커지는 고령층을 고려하지 않고 계급배반 성향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현우 외 2016).

〈그림 7〉 연령대별 소득계층 빈도분포(명)[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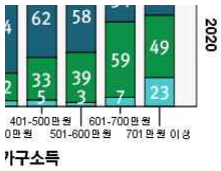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다른 한편, 계층인식과 이념/정당 태도 간의 부조응 현상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계층 정체성이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일치하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8〉을 보면, 2010년 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이 스스로를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소득구간이 월 가구소득 301~400만원 이하층의 58%가 하위층이라고 응답했고, 2015년 조사에서는 401~500만원 이하층의 53%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2020

12) 히스토그램 막대는 빈도, 곡선은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 그래프.

년 조사에서는 월 가구소득이 501~600만원 층의 58%가 스스로 하위층이라 답했다. 심지어 월 가구소득이 700만원이 넘는 응답자 중의 29%는 스스로 하위계층이라 답하고, 23%만이 자신을 상위계층이라 답했다. 물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스스로 상위층 인식이 상승하는 상관관계는 확인된다. 자신의 객관적 소득수준 대비 스스로 '하위계층'으로 평가절하하는 빈곤층 인식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부를만하다. 객관적인 소득분포와 주관적인 정체성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층적 지위나 계층인식(정체성)과 이념/정당 태도간의 교란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소득계층별 주관적 계층 정체성 분포의 변화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IV. 이슈선호와 정치·이념 균열: 집단간 격차와 이슈별 상충성의 공존

국가정체성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사회갈등 요인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건 개인적 수준에서건 정치균열(정당태도)과 주관적 이념 정체성 간의 중첩현상이 강화되는 반면, 사회균열 요인과의 연계는 약화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정당태도와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이갑윤·이현우 2008). 정당균열과 이념균열의 중첩현상과 양극화 심화 경향이 실제 이슈나 정책 차원에서의 양극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가? 그동안 지역균열이 약화되고 세대 및 이념 요인의 선거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통적으로 이념적 쟁점이슈로 작동해온 대북안보 이슈나 정치적 자유주의, 약자의 인권 관련 이슈 외에 경제이슈, 사회정책 이슈로 정치적, 이념적 갈등 양상이 확대되어 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즉 정책투표, 이슈투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강원택 2010; 김성연·김준석·길정아 2013; 박원호 2012; 지병근 2013). 그러나 최근에는 이슈와 정책선호에서의 차이가 실제 투표행태나 이념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슈영역별로 이분법적인 양극화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전통적인 이념적 갈등이슈에서의 수렴현상과 이슈간 상충성(ambivalent attitude, 태도 비일관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늘어나고 있다(정한울 2013; 유성진 2009).

이러한 양 입장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동과 각 이슈영역별로 종합적인 진단을 필요로 한다. 그간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가 두드러졌던 이슈를 보면 (1) 대북안보 이슈 (2) 정치적 자유 대 권위주의적 태도(사회 질서 우선) (3) 경제 영역(성장 대 복지)으로 요약된다. 사형제나 동성애 등 사회 이슈에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고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가정체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5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정치적, 이념적 갈등 이슈에서도 양극화의 심화로 해석하기 어려운 현상이 확인된다. 개별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정당지지나 주관적 이념 정체성)에 따라 개별 쟁점 이슈들에 대한 선호 격차는 유지되면서도(이슈 태도의 양극화), 진보-보수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반대되기보다는 특정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이슈에서는 진보적 가치(대북지원 및 협력에 대한 지지)가, 안보 문제서는 보수적 가치(한미동맹 중시) 쪽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결과적으로 이슈 간에는 서로 상반된 선호가 공존하는 상충적/양가적 태도(ambivalent attitude)가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정한울·지은주 2018).

### 1. 이슈 선호 양극화되고 있나?: 이슈 내 선호 수렴과 이슈 태도 간 상충성 강화

지난 15년간 국가정체성 조사의 동일 질문에 대한 선호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주요 갈등이슈 영역인 (1) 대북안보 이슈 (2) 정치적 자유주의 vs. 보수주의 (3) 경제 이슈 영역에서 상충성 혹은 양가적 인식의 강화현상이 발견된다.

#### ① 대북안보 이슈: 보수적 햇볕정책 주의자의 증감, 진보적 한미동맹 주의자의 증가

기존 연구에서 이념적, 정치적 대결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이슈 영역인 대북안보 영역에서도 쟁점영역을 확장하면 이념적 양극화 현상보다 다차원적 상충적 태도의 강화 현상에 주목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 조사에서의 대표적인 대북안보 이슈인 '대북지원'과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전통적인 '진보=친북=반미' vs '보수=반북=친미'의 이분법 구도 대신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확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진보적 가치)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동맹강화 입장(보수적 가치)으로의 수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그림7).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강도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과반의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증가해왔다(2005년 30% → 2010년 38% → 2015년 43% → 2020년 45%). 대신 2005년 조사에서는 3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자주외교' 선호응답이 이후 20%대에 머물고 있다. 즉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방적인 반공 대결의식에서 탈피하여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

는 햇볕정책의 문제의식(진보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확산되었다면, 반대로 북핵 문제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보수적 가치)가 동시에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그 결과 대북안보이슈에 이념적 수렴현상, 즉 대북/대미 이슈축 사이에서는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 양가적 정서가 강화되는 추세였다고 볼 수 있다(이현우 외 2016; 정한울·지은주 2018).

〈표 8〉 대북지원과 한미동맹에 대한 응답분포 변화(%)

| | | 대북지원*** | | | | 한미동맹*** | | | |
|---|---|---|---|---|---|---|---|---|---|
| | | 확대 유지 | 축소 중단 | 모름 무응답 | 전체 | 자주 외교 | 중립 | 동맹 강화 | 전체 |
| 조사연도 | 2005 | 60 | 35 | 5 | 100 | 37 | 33 | 30 | 100 |
| | 2010 | 53 | 46 | 1 | 100 | 26 | 36 | 38 | 100 |
| | 2015 | 67 | 33 | 0 | 100 | 21 | 36 | 43 | 100 |
| | 2020 | 51 | 49 | 0 | 100 | 27 | 28 | 45 | 100 |
| 전체 | | 58 | 41 | 2 | 100 | 28 | 33 | 39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앞서 본 것처럼 양당 지지층간 주관적 인식 상의 이념정체성의 양극화 현상은 강화된 것이 사실이나 이슈별 태도에서는 오히려 각 진영의 생각이 침투하는 과정이었다. 보수층 내에서 대북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위 '보수적 햇볕정책론자'들의 비중이 적지 않고 진보층 내에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진보적 동맹론자'들이 증가되어 왔다. 정당 지지자별로 보면 대북지원 이슈에 대해서는 2005년에서 2015년 조사까지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대북지원 확대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계열 지지자들 사이에서 축소/중단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근 다시 보수층에서 안티북한 정서가 강해지며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민주당 계열 지지자와 통합당 계열 지지자 사이에 극단적인 인식격차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5%가 대북지원을, 통합당 지지자의 70%가 축소 중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대북이슈에서조차 이념적 수렴현상이 나타났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표 9).

그러나 한미동맹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념적 수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5년 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다수가 자주외교를, 한나라당 지지자의 다수는 동맹강화를 선호하는 여론이 대립했다. 이후 민주당 계열 지지자 중에서 동맹강화 여론이 강화되면서 2020년 조사에서는 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 한미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36%, 자주외교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33%로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변화했다.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으로 접어들고, 탄핵 이후 여야 간 이념적 색깔론에 기반한 정치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북정책 이슈에서는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다시 점화되는 듯하다. 동시에 대표적인 이념적 쟁점이슈의 하나인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높은 합의수준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진보=친북=반미' 대 '보수=반북=친미'의 이분법 구도로의 회귀를 점치는 것도 성급해보인다.

〈표 9〉 정당 지지별 대북지원과 한미동맹에 대한 응답분포 변화(%)

| 조사연도 | | 대북지원 | | | | 한미동맹 | | | |
|---|---|---|---|---|---|---|---|---|---|
| | | 확대 유지 | 축소 중단 | 모름 무응답 | 전체 | 자주 외교 | 중립 | 동맹 강화 | 전체 |
| 2005 | 열린우리당 | 70 | 27 | 4 | 100 | 44 | 31 | 26 | 100 |
| | 한나라당 | 50 | 46 | 4 | 100 | 31 | 29 | 40 | 100 |
| | 전체 | 58 | 38 | 4 | 100 | 36 | 30 | 35 | 100 |
| 2010 | 민주당 | 64 | 36 | 0 | 100 | 35 | 33 | 32 | 100 |
| | 한나라당 | 50 | 50 | 1 | 100 | 17 | 34 | 49 | 100 |
| | 전체 | 55 | 44 | 0 | 100 | 25 | 33 | 42 | 100 |
| 2015 | 새정치민주연합 | 73 | 27 | 0 | 100 | 28 | 40 | 31 | 100 |
| | 새누리당 | 58 | 42 | 0 | 100 | 16 | 29 | 54 | 100 |
| | 전체 | 63 | 37 | 0 | 100 | 21 | 33 | 46 | 100 |
| 2020 | 더불어민주당 | 65 | 34 | 1 | 100 | 33 | 31 | 36 | 100 |
| | 미래통합당 | 30 | 70 | 0 | 100 | 16 | 23 | 61 | 100 |
| | 전체 | 55 | 45 | 1 | 100 | 28 | 29 | 43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②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합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의 공존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 경향이 개별 질문에 따라 상충된 양상이 확인된다.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05년 첫 조사 이래 현재까지 60%가 넘는 수준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사회적 질서 유지가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0년 조사에서 51% 대 48%로 입장이 엇갈렸다. 2015년, 2020년 조사에서는 '사회질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보수주의적 견해에 대한 동의가 70%를 넘었다. 다수 정서보다 소수의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자유주의의 태도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관련한 이슈 영역에서 양극화된 갈등의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10).

양당 지지자 간 '다수 정서에 반하는 소수 인권 보호'와 '개인 자유 대 사회질서'의 태도 변화를 보면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당 지지층 공히 소수 인권 보호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다. 반면 '개인의 자유 대 사회질서'에 대해서는 2010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 공히 찬반이 엇갈렸다. 그러나 2015년 조사부터는 '사회질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지지비율이 양당 지지층에서 공히 70%를 넘어서면서 보수주의적 입장으로 급격하게 수렴되는 양상이다. 양당 지지층에서 소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가치로 수렴하고, 개인의 자유 대 사회질서 유지에 대해서는 보수적 가치로의 수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는 상충적 경향이 확인된다.

〈표 10〉 '소수 인권보호'와 '개인자유 대 사회질서'에 대한 태도 변화(%)

| | | 다수의 정서와 소수의 인권 보호 | | | 전체 | 자유와 질서*** | | | 전체 |
|---|---|---|---|---|---|---|---|---|---|
| | | 비동의 | 동의 | 모름 무응답 | | 개인자유 우선 | 사회질서 우선 | 모름 무응답 | |
| 조사연도 | 2005 | 32 | 65 | 2 | 100 | – | – | – | |
| | 2010 | 34 | 66 | 0 | 100 | 51 | 48 | 0 | 100 |
| | 2015 | 26 | 74 | 0 | 100 | 23 | 77 | 0 | 100 |
| | 2020 | 35 | 65 | 0 | 100 | 23 | 76 | 0 | 100 |
| 전체 | | 32 | 68 | 1 | 100 | 33 | 67 | 0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11〉 정당 지지별 '소수 인권보호'와 '개인자유 대 사회질서'에 대한 태도 변화(%)

| | | 다수정서 보다 소수 인권 | | | | 개인 자유 대 질서 | | | |
|---|---|---|---|---|---|---|---|---|---|
| 조사연도 | | 동의 안함 | 동의 | 모름 무응답 | 전체 | 개인 자유 | 사회 질서 | 모름 무응답 | 전체 |
| 2005 | 열린우리당 | 33 | 66 | 1 | 100 | – | – | – | – |
| | 한나라당 | 37 | 61 | 2 | 100 | – | – | – | – |
| 전체 | | 35 | 63 | 2 | 100 | – | – | – | – |
| 2010 | 민주당 | 30 | 69 | 0 | 100 | 50 | 50 | | 100 |
| | 한나라당 | 35 | 65 | | 100 | 49 | 51 | 0 | 100 |
| 전체 | | 33 | 67 | 0 | 100 | 49 | 51 | 0 | 100 |
| 2015 | 새정치민주연합 | 22 | 78 | | 100 | 25 | 75 | | 100 |
| | 새누리당 | 31 | 69 | | 100 | 22 | 78 | | 100 |
| 전체 | | 28 | 72 | | 100 | 23 | 77 | | 100 |
| 2020 | 더불어민주당 | 34 | 66 | | 100 | 27 | 73 | 1 | 100 |
| | 미래통합당 | 40 | 60 | | 100 | 19 | 81 | | 100 |
| 전체 | | 36 | 64 | | 100 | 24 | 75 | 0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③ 성장주의 대 안티 신자유주의의 공존

경제 이슈에서도 집합적 차원에서 성장우선주의에 대한 다수의 지지와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노선에 대한 반대가 공존한다. 성장 대 복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체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을 넘고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커지면서 69%가 성장주의 선호를 보이고 있다. 국가 경제정책의 기조에서는 성장 우선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성장주의 우위의 정책 선호분포는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이현우 외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성장과 복지에 대해 동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복지보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58%~78%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이현우 외 2016, 225). 그러나 성장주의에 대한 선호가 시장규제의 약화,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일반에 대한 선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2차 조사부터 일관되게 과반 이상이 안정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당지지별 입장 차이를 보면 역시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자에 비해 통합당 계

열 정당 지지자들이 성장주의 선호 경향이 강하고,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지 선호가 높은 패턴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그러나 2020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증가(66%)하면서 이념적 쟁점 이슈라기보다는 합의 이슈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로 민영화 대신 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경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 여론을 점하고 있다. 보수정당 지지층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지지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 확대 지지여론에는 못 미친다. 한국사회에서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양립 가능한 이슈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결과이다.

〈표 12〉 '성장 대 복지' 노선과 '공공경제'에 대한 태도 변화(%)

| | | 성장 대 복지 | | | 전체 | 공기업 민영화 | | | 전체 |
|---|---|---|---|---|---|---|---|---|---|
| | | 성장우선 | 복지우선 | 모름 무응답 | |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확대 | 모름 무응답 | |
| 조사연도 | 2005 | 55 | 34 | 12 | 100 | – | – | – | – |
| | 2010 | 52 | 46 | 2 | 100 | 44 | 54 | 2 | 100 |
| | 2015 | 57 | 43 | 0 | 100 | 46 | 54 | 0 | 100 |
| | 2020 | 69 | 31 | 0 | 100 | 43 | 56 | 0 | 100 |
| 전체 | | 58 | 38 | 4 | 100 | 48 | 52 | 1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13〉 정당 지지별 '성장 대 복지' 노선과 '공공경제'에 대한 태도 변화(%)

| 조사연도 | | 성장 대 복지 | | | 전체 | 공공경제 | | | 전체 |
|---|---|---|---|---|---|---|---|---|---|
| | | 성장 우선 | 복지 우선 | 모름 무응답 | |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확대 | 모름 무응답 | |
| 2005 | 열린우리당 | 48 | 42 | 9 | 100 | – | – | – | – |
| | 한나라당 | 61 | 27 | 12 | 100 | – | – | – | – |
| 전체 | | 56 | 33 | 11 | 100 | – | – | – | – |
| 2010 | 민주당 | 47 | 51 | 1 | 100 | 38 | 61 | 1 | 100 |
| | 한나라당 | 60 | 39 | 1 | 100 | 48 | 51 | 1 | 100 |
| 전체 | | 55 | 44 | 1 | 100 | 44 | 55 | 1 | 100 |
| 2015 | 새정치민주연합 | 50 | 50 | 0 | 100 | 35 | 65 | 0 | 100 |
| | 새누리당 | 65 | 35 | 0 | 100 | 50 | 50 | 0 | 100 |
| 전체 | | 60 | 40 | 0 | 100 | 45 | 55 | 0 | 100 |
| 2020 | 더불어민주당 | 66 | 34 | 0 | 100 | 41 | 59 | 0 | 100 |
| | 미래통합당 | 81 | 19 | 0 | 100 | 47 | 53 | 0 | 100 |
| 전체 | | 70 | 30 | 0 | 100 | 43 | 57 | 0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2. 정치이념의 양극화과 사회갈등 및 이슈태도와 괴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이념-정당 중첩현상 vs, 사회균열-정책/이슈와의 괴리

주관적 이념정체성 단일지표와 정당지지 지표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념과 정당 태도

간의 중첩도는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지만, 이슈 태도에서의 양극화 현상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세대 및 이념균열이 부상하는 초기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는 주로 북한, 미국과 관련한 안보이슈에 대한 태도였다. 투표행태나 정당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국가보안법이나 사형제 폐지와 같은 인권,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였다고 분석해왔다(강원택 2010; 이현우 외 2016). 이후 2008년 세계 경제위기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 이슈의 부상을 거친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대북 안보 이슈, 복지 정책 선호, 경제 이슈에 대한 태도가 주관적 이념성향, 정당 태도, 선거행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강우진 2013; 김성연·김준석·길정아 2013; 지병근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정당 태도나 주관적 이념정체성에서의 균열 중첩 현상과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지만, 여타의 사회갈등구조(이익갈등 요인/정체성 갈등요인)와의 연계는 약해지고, 이슈 및 정책 선호와의 연계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2017년 19대 대선에서의 영역별 정책 이슈 선호와 투표선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한규섭 외의 연구에서 18대 대선과 6회 지방선거와 달리 19대 대선에서는 정책 투표의 영향력이 감소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한규섭·이혜림·장슬기 2018). 세대별 이념집단과 정파적 이슈, 정당지지, 정책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강원택과 성예진의 연구는 국정 평가, 탄핵에 대한 태도, 정당 선호 등을 정파적 태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여 정파적 태도와 이념적 태도(주관적 정체성)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객관적인 정책이슈 태도에 대해서는 정당지지 변수(정파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세대-이념-정책 태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만 정당지지 변수를 포함할 경우 2030세대에서만 경제적 요인, 정책이슈가 유의하고, 다른 세대에서는 정책 선호의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강원택·성예진 2018). 정치이념(주관적 정체성)과 정책선호와의 일관성과 19대 대선에서의 투표선택을 분석한 류재성은 많은 정책이슈에서 합의 이슈(valence issue)가 증가하고, 정책선호에서 진보-보수성향이 혼재한 교차 유권자층이 존재(진보 정체성 집단층의 31%가 보수정책 선호경향을, 보수 정체성층의 28%가 진보정책을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진보정체성-진보정책 선호층이 문재인 후보를, 보수정체성-보수정책 선호층이 홍준표 후보를, 보수정체성-진보정책 선호층은 유승민 후보, 진보정체성-보수정책 선호층에서 안철수 후보지지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이다(류재성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념정체성과 정당 태도 간의 중첩성 강화 및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사회정책적 갈등과 괴리되고 있다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들과 맥을 같이하는 현상임을 뒷받침한다.

### ② 무엇이 괴리를 가져오나?

이러한 괴리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과 검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남기고 보다 정밀한 검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미국 선거연구에서 정치이념적 양극화에 대한 논쟁을 보면 크게 (1) 정당 양극화는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의 산물인가(Abramowitz 2010) 이념적 재편 아닌 정당의 재정렬(partisan sorting)의 결과인가(Fiorina et al. 2006) (2) 양극화 균열의 축이 경제 이슈 축인가 아니면 문화적 이슈 축(낙태 등)인가(Layman and Carsey 2002) (3) 정치엘리트의 양극화(정치적 동원)가 우선인가, 대중의 양극화가 우선인가(McCarty, Poole, and Rosenthal 2006) (4) 양극화의 원인으로서 ① 소득불평등의 심화(사회경제적 양극화) ② 정치엘리트(양당) 간의 경쟁 격화와 정파적 동원 ③ 미디어의 양극화 영향에 주목한 논의로 압축된다(McCarty 2019).[13]

주관적 이념적 정체성과 정당지지로 보면 아브라모비츠의 주장처럼 정당-이념 양극화 현상(partisan-ideological polarization)의 강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확인되지만, 본 조사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이념-정책/이슈 태도 간의 제약(constraint)과 태도 일관성(consistency) 차원에서는 정당-이념 양극화 현상은 거리가 멀다. 또한 본 조사와 기존 연구들에서 계층인식이나 소득 격차에 따른 정당지지, 이념성향과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정당-이념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장 주목할 수 있는 변수는 정치엘리트(정당) 간 이념적 경쟁 격화 및 진영의 동원 현상과 미디어의 영향이다.

### 가설 1. 각 정당의 정파적 진영동원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나 객관적인 정책 선호와 연계되지 않은 주관적 정당-이념 중첩과 양극화 현상은 이익기반의 정책 제시를 통해 지지를 동원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반감을 동원하는 정파적 진영대결의 정치가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 2010년 전후부터 대중 차원에서는 이념적 제약에서 탈피하여 현실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그 결과 이슈별로 유연하게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지만, 이미 당시부터 양당 엘리트 사이에서는 양극화된 정책선호가 발견된 바 있다. 즉 엘리트 차원에서는 '진보=친북=반미=복지주의=진보정당 지지' 대 '보수=반북=친미=성장주의=보수당 지지'라는 중첩된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16대 총선에서 19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들과 일반국민 대상으로 경제, 안보, 사회 분야별 정책 이슈 태도와 주관적 이념정체성을 비교한 강원택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슈태도-이념정체성 간의 상관성이 미약한 반면 국회의원들의 경우 소속정당-이념정체성-이슈태도 사이의 일관성과 중첩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 맥커티와 동료들은 앞의 요인들 외에 개리맨더링 효과, 지리학적 요인(geography)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기한 바 있다(McCarty 2019).

〈그림 9〉 정치엘리트 수준 이념적 양극화 심화(0 매우 진보, 5 중도, 10 매우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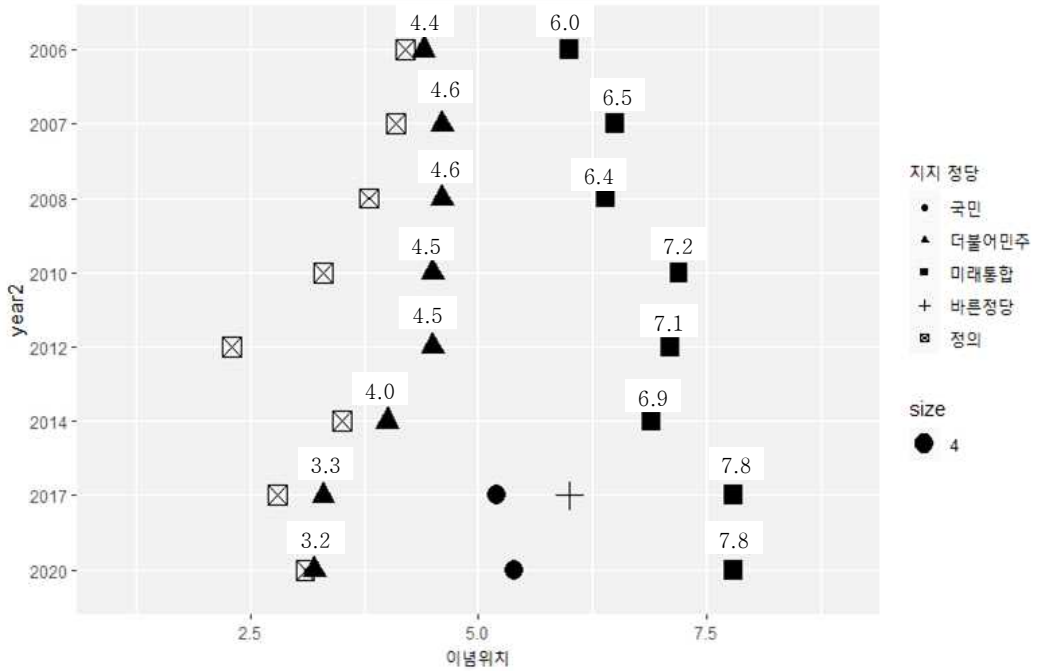
■ 출처: 강원택(2012), 0점~5점 미만은 진보, 5점 중도, 6~10점은 보수,
■ 데이터: 〈중앙일보·한국정당학회〉(2002-2012)

이는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20년 총선까지 주요 전국선거에서 실시한 선거패널조사(KEPS) 응답자들에게 주요 정당의 이념 위치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0(매우 진보)~10점(매우 보수)으로 답한 응답평균이다. 2006년 지방선거 직후만 해도 국민들의 눈에 열린우리당의 이념위치는 진보-보수 축위에 4.4, 한나라당의 이념위치는 6.0으로 1.6점 포인트 차에 불과했지만, 2010년 전후로 한나라당의 이념위치 평가가 7.0점 전후로 이동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열린 지방선거부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4.0으로 평가했고, 2017년과 2020년 선거에서는 3.2까지 낮아져 정의당의 이념위치 평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좌향좌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제 양당 이념평가 점수 격차가 4.6점 포인트까지 벌어짐으로써 국민들의 눈에 정당간 이념적 양극화는 급속하게 심화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강원택 2012; 이내영 2011; 정한울·이곤수 2010).

문제는 이후 촛불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그나마 양당 간 정책경쟁 풍토가 사라지고 탄핵의 정당성이나,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등 인사나 도덕성 관련 이슈에 매몰되는 양상이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는 '종북좌파', '토착왜구' 등 험한 '색깔론' 논쟁으로 진영 결집에 의존한 선거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결국 현재의 이념-정당 중첩 및 양극화 현상은 아브라모비츠가 주장하듯, 사회계층적 갈등이나 정책 이슈 선호에서의 균열을 기반으로 이념정체성과 정당 당파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맹목적 일체감이나 상대 당에 대한 정서적 적대감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이념적 태도와 정당 태도가 역으로 규정당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대중 수준에서의 실질적 태도변화에 기반한 양극화의 심화라기보다는 정당엘리트 차원에서의 양극화 심화 및 진영 동원의 결과이자 정서적 양극화의 결과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이내영 2011; Iyengar et al. 2012; McCarty 2019, 61-62).

〈그림 10〉 양당의 이념위치에 대한 평가 변화(0 매우 진보, 5 중도, 10 매우 보수)




■ 자료: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KEPS패널조사(2006~2014), EAI·한국리서치 KEPS패널조사(2017~2020)

### 가설 2. 뉴 미디어의 정치적 경도와 수용자의 편향적 정보 취득

SNS 온라인 중심의 매체 환경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기관과 종사자가 아닌 개인방송, 개인 사설 매체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정당 경쟁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고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정치적 경도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매체의 정치적 치우침" 현상으로 정의된다. 정치적 경도 현상의 강화가 수용자 사이의 편향적 정보 취득과 결합되면서 미디어 효과에 의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언론매체는 언론매체대로 정파적 보도를 확대하고, 수용자는 동조화 효과(assimilation effect) 및 대조 효과(contrast effect)와 같은 인지편향이 작동한다. 정당태도-이념 정체성의 양극화 현상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종희 2016; 이종혁 2015).

2020년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지난 1주일간 뉴스나 시사정보를 어디서 보거나 들었는지' 묻고 '종이신문', '지상파 TV', '종편 TV', '라디오', '잡지'와 같은 전통적 미

디어와 '인터넷 포털', '뉴스 사이트', 'SNS', '메신저 서비스', '동영상 플랫폼',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서 2개를 순위대로 중복 응답한 결과를 보자. 둘 다 전통 미디어 중에서 택한 경우나 하나의 전통 미디어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전통 미디어 편중 수용자'로 분류하고, 반대로 둘 다 뉴미디어에서 택하거나 하나의 전통 미디어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뉴 미디어 편중 수용자'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순위에 상관없이 하나는 전통 미디어, 다른 하나의 매체는 뉴미디어를 택한 경우 '복합 매체 수용자'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통 미디어 편중 수용자'가 37%, '뉴 미디어 편중 수용자'는 24%,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를 함께 이용하는 '복합 수용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표 14〉 세대/이념성향/정당 지지별 매체 이용 유형(%)

| | | 매체 이용 유형 | | | |
|---|---|---|---|---|---|
| | | 전통 미디어 편중 | 복합 (전통+뉴 미디어) | 뉴 미디어 편중 | 총계 |
| 전체 | | 37 | 39 | 24 | 100 |
| 연령대 *** | 19~29세 | 5 | 31 | 63 | 100 |
| | 30대 | 13 | 48 | 39 | 100 |
| | 40대 | 24 | 53 | 23 | 100 |
| | 50대 | 37 | 53 | 10 | 100 |
| | 60대+ | 81 | 19 | 0 | 100 |
| 이념성향 *** | 진보(0-4) | 21 | 45 | 33 | 100 |
| | 중도(5) | 33 | 41 | 26 | 100 |
| | 보수(6-10) | 62 | 28 | 10 | 100 |
| 지지정당 *** | 더불어민주당 | 30 | 42 | 28 | 100 |
| | 제3당 | 30 | 47 | 23 | 100 |
| | 무당파 | 38 | 35 | 27 | 100 |
| | 통합당 | 55 | 34 | 11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카이제곱 검정 *** (p<0.01)

예상대로 세대와 이념성향, 지지정당에 따라 정보 취득 매체의 차이가 뚜렷하다. 20대는 '뉴미디어만 사용하는 층'이 63%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 50대까지의 중간 세대에서는 양 매체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 수용자'가 48%~53%로 많았다. 30대에서는 그다음으로 뉴 미디어 편중(39%) 〉 전통 미디어(5%) 편중 순인 반면, 50대는 2순위가 전통 미디어(37%), '뉴미디어 편중'(10%)에 불과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전통 미디어 편중' 수용자 층이 62%로 다수인 반면, '복합 미디어 수용자' 층은 19%, 뉴미디어만 활용하는 층은 없었다. 반면 이념적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복합수용 유형이 40%를 넘어 다수였다. 그 뒤로 진보층에서는 '뉴미디어 편중' 층이 33%로 두 번째로 많은 반면 중도층에서는 '전통 미디어 편중' 층이 역시 33%로 많았다. 보수층은 62%가 여전히 '전통 미디어 편중 수용층'이었고, 28%가 '복합수용층'으로 분류되었다. 최근 보수 유튜버의 확산으로 보수층의 뉴미디어 매체 활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보수층 일각의 현상으로서 평균적인 보수 이념층은 여전히 전통 매체 의존도가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복합유형'이 42%로 가장 많았고, '전통 미디어 편중층'이 30%, '뉴미디어 편중층'이 28%로 비슷했다. 반면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55%가 '전통 미디어 편중층'으로서 전통 미디어 의존도가 높았다. 무당파에서도 38%가 '전통 미디어 편중층', 35%가 '복합 이용층'이었고, 제3당 지지층에서는 47%가 '복합유형',

30%가 '전통 미디어 편중층'으로서 '뉴 미디어 편중층'은 소수 그룹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미디어 이용유형이 이념 갈등을 보는 인식 강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표 15〉를 보면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통 미디어 편중'층이나 '복합 수용'층에서는 39~41% 내외 정도가 매우 크다고 답했다. 그러나 '뉴 미디어 편중'층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49%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를 이념 정체성 별로 나누어 보면 이념적 당파성을 갖고 있는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뉴 미디어 이용 여부가 진보-보수 갈등에 대한 인식에 큰 편차를 가져온다. 이념적 당파성이 약한 중도층에서는 미디어 이용형태별로 진보-보수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37%~42%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당파성을 보유한 진보층이나 보수층에서는 뉴미디어 편중 층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매우 크게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12%p~16%p 이상 높다. 인과관계의 방향까지 규명할 수는 없지만 정보 취득 매체로서 뉴미디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념갈등의 심각성을 강하게 체감한다는 의미다. 이는 뉴미디어의 이용이 이념갈등 인식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이념성향별 미디어 이용유형별 이념갈등 평가(%)

| 이념성향 유형 | 매체 이용 | 진보와 보수 | | | | | |
|---|---|---|---|---|---|---|---|
| | | 매우 크다 | 대체로 크다 | 보통이다 | 대체로 작다 | 매우 작다 | 전체 |
| 진보* | 전통 미디어 편중 | 42 | 38 | 20 | 0 | 0 | 100 |
| | 복합(전통+뉴 미디어) | 41 | 48 | 10 | 1 | 0 | 100 |
| | 뉴 미디어 편중 | 54 | 34 | 9 | 3 | 0 | 100 |
| | 전체 | 46 | 41 | 12 | 1 | 0 | 100 |
| 중도 | 전통 미디어 편중 | 37 | 44 | 14 | 5 | 0 | 100 |
| | 복합(전통+뉴 미디어) | 41 | 38 | 19 | 1 | 1 | 100 |
| | 뉴 미디어 편중 | 42 | 37 | 19 | 3 | 0 | 100 |
| | 전체 | 40 | 40 | 17 | 3 | 0 | 100 |
| 보수† | 전통 미디어 편중 | 40 | 44 | 15 | 1 | 0 | 100 |
| | 복합(전통+뉴 미디어) | 39 | 50 | 11 | 0 | 0 | 100 |
| | 뉴 미디어 편중 | 56 | 16 | 28 | 0 | 0 | 100 |
| | 전체 | 42 | 43 | 15 | 0 | 0 | 100 |
| 전체 | 전통 미디어 편중 | 39 | 43 | 15 | 2 | 0 | 100 |
| | 복합(전통+뉴 미디어) | 41 | 44 | 14 | 1 | 0 | 100 |
| | 뉴 미디어 편중 | 49 | 33 | 15 | 3 | 0 | 100 |
| | 전체 | 42 | 41 | 15 | 2 | 0 | 100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카이제곱 검정 * ($p<0.05$), † ($p<0.1$)

## V. 맺으며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제는 공동체의 유지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질,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좌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현상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동시에 젠더, LGBT 성 소수자, 난민 이슈 등에서 정체성 기반의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정치·이념적 갈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5년간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해보면 무엇보다 한국인들 스스로 이익기반의 사회갈등과 정체성 기반의 사회갈등을 일관되게 구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2000년대 초반 대비 이념갈등과 정당대결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념 및 정당 갈등을 다른 사회갈등 요인들과 독립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이념적 성향과 지지정당이 중첩되는 정치 이념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 이념 갈등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거균열 요인인 지역주의, 2000년대 이후 투표 예측의 핵심 변수인 세대균열, 민주주의의 위기국면 하에서 주목받는 계층균열 차원에서 이념정체성, 정당지지와의 상관관계는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거나 심지어 약화되는 추세도 확인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념 성향별로 정책 선호나 정치행태에서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 안보이슈,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가치관이나 정책선호에서는 진보적 선호와 보수적 선호가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 역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당지지-이념정체성-이슈태도가 일관된 당파적 사회집단과 함께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한 유권자 집단의 규모가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현재 한국사회에서 표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념-정당 중첩 및 양극화 현상은 소득불평등이나 사회집단 간 양극화에 기반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유권자 차원에서 상충적 태도가 강화되어왔다는 점에서 정당-이념의 중첩 및 양극화 현상이 객관적인 이슈 영역이나 정책 쟁점에서의 인식 간극과 태도 균열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념태도와 정당태도가 중첩되고, 집단간 거리가 커지며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는 현상이 사회적 기반과 객관적 정책 선호의 균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 정치이념적 양극화 현상의 심화 대 개별 정책이슈에서의 상충성 강화 현상이 충돌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양 진영의 정당과 행위자들이 탄핵을 거치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던 정책대결 노력 대신 '막말', '가짜뉴스' 등에 기반한 강성의 핵심 지지층 동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매몰된 결과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막말과 가짜뉴스, 적대감의 동원이 정치적 경도가 뚜렷한 뉴 미디어의 부상과 관련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반 없이 정책 이슈 태도와의 연계가 결여된 양극화는 양극화 현상이 갖는 순기능(지지층을 정치적으로 대변, 시민참여와 관여도 제고, 사회적 결속도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전통적인 갈등요인들을 대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향후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정체성 관련 갈등 요인이 심화될 경우 한국사회의 갈등 구조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15년간 한국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는 커져왔고, 우려되는 정치이념적 현상도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주요 갈등이슈영역이나 정책 쟁점들에 대한 여론은 수렴되거나 진보-보수의 틀을 넘어 유연하게 사고하는 경향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절망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총선 이후 탄핵 이후 총선까지 막말, 이념공세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성과 혁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선거 이후에는 부쩍 정당 경쟁에서 거친 언행과 맹목적인 정파적 동원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탄핵과 이후 수습과정에서 빠르게 형성된 정서적 양극화와 반감 동원의 정치를 다시 정상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한 긍정적 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절망과 냉소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을 지난 15년간의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강우진. 2014.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한국정치학회보』47(5): 213-233.

강원택. 2010.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 나남.

_____. 2012. “제19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의정연구』18(2): 5-38.

_____.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한국정당학회보』12(3): 115-128.

_____. 2016. “한국사회의 갈등인식의 변화, 2005-2015.”『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이내영 · 윤인진 공편, 183-20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강원택 · 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27(1): 201-239.

곽진영. 1998. “정당체제의 사회적 반영의 유형과 그 변화: 한국, 일본, 미국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32(1): 175-201.

곽진영 · 김은경. 2018. “한국정당체계의 사회적 이익 반영 패턴의 변화: 13대 총선~20대 총선.” 『사회과학연구』44(3): 161-184.

김성연 · 김준석 · 길정아. 2013. “한국 유권자들은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가?”『한국정치학회보』47(1): 167-183.

류재성. 2018. “정당 분열 및 유권자 분화.”『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강원택 · 박원호 · 김석호 편, 71-106. 파주: 나남.

문우진. 2017. “지역주의 투표의 특성과 변화: 이론적 쟁점과 경험분석.”『의정연구』23(1): 81-111.

박종희. 2016. “세월호 참사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한국정치학회보』50(1): 239-269.

성경륭. 2009. “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분쟁해결연구』7(2): 27-47.

유성진. 2009. “상충적 유권자: 민주주의의 적인가, 이상적 유권자인가?”『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김민전 · 이내영 공편, 99-127.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윤광일. 2018. “균열구조와 19대 대선: 완전한 균열로서의 지역균열.”『한국정치연구』27(1): 241-280.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행태』서울: 후마니타스.

이갑윤 · 이현우. 2008. “이념 투표의 영향력 분석.”『현대정치연구』1(1): 137-167.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한국정당학회보』10(2): 251-285.

이내영. 2016. “한국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5-2015.”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이내영 · 윤인진 공편, 207-233.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영라 · 이숙종. 2018.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행정논총』56(2): 159-190.

이재열. 2011. “사회발전과 사회적 갈등해소 능력.”『한국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김광억 · 김병연 · 이재열 · 전재성 · 홍기현 공편. 42-9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_____.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계간사상』37: 65-93.

이종혁. 2015. “언론 보도의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우호적, 중도적, 적대적 매체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언론학보』59(1): 7-36.

이현우 · 이지호 · 서복경 · 남봉우 · 성홍식. 2016.『표심의 역습: 빈부, 세대, 지역, 이념을 통해 새로 그리는 유권자 지도』. 서울: 책담.

장훈. 2006. “경쟁국가의 정치사회: 통합과 다층화의 정치사회를 위한 제도 · 이념 · 행위의 개혁.”『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장훈 · 정진영 공편, 145-16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2013. “정당태도갈등이 투표행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 18대 총선 및 19대 총선 패널조사(KEPS)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보』12(1): 243-277.

정한울 · 강우창. 2017. “콘크리트 보수의 균열: 스윙 보수층의 등장 원인과 결과.”『변화하는 한국유권자6: 촛불집회, 탄핵정국과 19대 대통령 선거』. 강원택 편, 75-10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 이곤수. 2011. “한국 정치사회어젠다의 정책선호 지형.”『EAI 오피니언리뷰』 2011(6): 1-30.

정한울 · 송경재 · 허석재. 2019.『사회적 갈등의 경로 분석과 사전 예방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정한울 · 지은주. 2018. “대북여론 변화조짐과 남북관계 개선의 과제.”『여론속의여론』 2018(11): 2-8.

정한울. 2020. “세대 투표 연구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21대 총선.” 『동향과 전망』 109: 74-96.

지병근. 2013. “유권자들의 정책선호와 투표 선택.”『변화하는 한국유권자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이내영 · 서현진 편, 181-201.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진영재. 2020. 『정당정치의 진화』. 서울: 연대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천관율 · 정한울. 2019. 『20대 남자: 마이너리티 정체성의 부상』. 서울: 시사인북스.

한규섭 · 이혜림 · 장슬기. 2018. “정책투표.”『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강원택 · 박원호 · 김석호 편, 71-106, 343-67. 파주: 나남.

홍성수. 2019.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공존을 위한 과제.”『공존의 한국사회, 통합의 민주주의』. 한국사회과학회·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세미나 자료집.

Abramowitz, Alan I. 2010. *The Disappearing Center: Engaged Citizens, Polarizat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Bimber, Bruce. 2012. “Digital Media and Citizenship.” In *The Sage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Edited by Holli A. Semetko and Margaret Scammell, 115-126. LA: SAGE Publications.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2006.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Boston: Pearson Longman.

Gutmann, Amy. 2002. “Identity and Democracy: A Synthetic Perspective.” In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Edited by Ira Katznelson and Helen V. Milner, 542-567. NY: W.W. Norton & Company.

Hair Jr, Joseph F., William C. Black, Barry J. Babin, and Rolph E. Anderson. 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 UK: Cengage Learning EMEA.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4.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The Penguin Press. 조정환 · 정남영 · 서창현 역. 2008. 『다중』. 서울 : 세종서적.

Kang, Woo Chang and Han-Wool Jeong, 2019. "The Corruption Scandal and Vote Switching in South Korea's 19th Presidential Election." *Korea Journal* 59(1): 79-105.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yengar, Shanto, Gaurav Sood, and Yphtach Lelkes.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Layman, Geoffrey C. and Thomas M. Carsey.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86-802.

Lewis-Beck, Michael S., William G. Jacoby, Helmut Norpoth, and Herbert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M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 An Introduction." In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Edited by Seymour Martin Lipset and Stein Rokkan, 1-67. NY: Free Press.

Lvett, Frank. 2010. *A General Theory of Domination and Justice*. 조계원 역. 2019. 『지배와 정의에 관한 일반이론』. 서울: 박영사.

McCarty, Nolan. 2019. *Polarization: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cCarty, Nolan, Keith T. Poole, and Howard Rosenthal.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MA: MIT Press.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van Dijk, Teun A. 1998. *Ideolog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London: SAGE Publication Ltd.

Wagner-Pacifici, Robin and Meredith Hall. 2012.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8: 181-199.

ⓒ EAI 2020

■ 저자: **정한울**_한국리서치 여론분석전문위원 및 리서치 디자이너.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행태, 선거정치, 대외안보인식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세대투표 연구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21대 총선〉 (2020), 〈한국인의 신안보인식: 변화와 지속성〉 (2019),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의 부상〉(2017) 등이 있다.

■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6) jwseo@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26일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
"한국인이 보는 사회갈등구조의 변화와 정치·이념 양극화의 실상" 979-11-6617-045-4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